

# 건설 '빅5'에 대운하 검토 요청

## 인수위, 5개사 사장 회동...내달초 토론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와 관련, 최근 국내 5대 건설사와 회동하고 다음달 초 국책연구기관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구립 28일 국내 5대 건설사 사장들과 조찬 모임을 갖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참여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런 움직임은 이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을 조기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건설업계의 참여 여부를 포함해 앞으로 정책화 과정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민간업체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형 건설사들에게 상업논리에 따라 대운하사업의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체들은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운하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원활한 기업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 팀장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건설업체 사장들이 참여했다.

한반도 대운하 TF는 '빅5' 건설사 사장 면담에 이어 다음주까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실무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월 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개발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대운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석학과 전문가가 모두 초청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운하에 찬성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도 모두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석효 팀장이 5대 건설사 CEO들을 만난 것은 그들이 기업 운영과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여서 초청해서 만난 것"이라며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같이 찾아가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구립 3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취입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과거 정부 잘된 것은 계승 발전 인수위 점령군 아닌 한시 기구”

### 이경숙 위원장 첫 기자회견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과거 정부의 일 중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잘된 것은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가진 취입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선에서 530만표라는 차이로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해 준 것으로 끝났다”며 “그러나 국정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잘 된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교 사회의 문제점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수위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을 신뢰한다”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격려하는 모습으로 공무원 사회가 변화될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는 일을 하지만 과욕을 부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의 최대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다. 경제살

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물은 과감히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 전제는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한시적인 실무 기구라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흑 일탈이 되면 언론이 따끔히 충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에 첫 진입하는 정부가 돼야 하며, 인수위가 튼튼한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정부의 시작은 일하는 인수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다”면서 “당선인이 일전에 가이드라인을 말씀했는데, 수는 줄이지 않고 기능조정을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인수위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파키스탄 정부, 부토 '死因 공방' 한발 후퇴

## 내무장관 “대변인 발언은 성급한 실수” 사죄

파키스탄 과도정부가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진실공방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현지 일간 '더 뉴스'에 따르면 과도정부측은 구립 31일 밤 전국 신문편집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브리핑에서 부토 사망원인에 관한 내부부 대변인의 발언이 성급한 실수였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하미드 나와즈 내무장관은 이날 부토 사망원인을 둘러싼 참석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가 지속되자 “대변인의 발언은 실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우리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를 용서하고 당시 발언은 무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자베드 이크발 차마 내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부토 암살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토는 섀루프 레버에 맞힌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키스탄인민당(PPP) 등 야권은 부토의 몸에 총상이 있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후 부토의 머리에 관통상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진 등 공개가 있었다.

/연합뉴스

# “북핵 신고 시한 초과 예상됐던 일”

## 美 의미 축소 “완전한 핵 신고 끌어내기 노력 계속”

미 국무부는 북한이 10.3 합의에 따른 시한인 구립 31일까지 북핵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핵 신고 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 북핵 협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런 일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번 같은 지연은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논평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10.3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신고 시한인 한국시간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워싱턴 시간 31일 오전 10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변화는 없었다”며 북한이 핵 신고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그러나 “중요한건 오늘까지 신고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합의 요건에 맞는 충분하고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조만간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를 갖고 북핵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케이시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국무부측의 이 같은 논평은 북한이 당초의 핵 신고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해도 이를 실제로 규정하기 보다는 북한이 앞으로 모든 핵프로그램과 물질, 확산활동을 망라한 포괄적인 핵신고에 응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과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3일 채택된 북핵 2단계 합의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과 물질, 활동을 신고하기로 했으나 당초 합의의 지키지 않은채 결국 시한을 넘겼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핵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포함한 일체의 핵자산 활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해왔으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이나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등을 강력히 부인, 신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안전상의 우려 등을 감안해 당초 목표로 연내에 완료되지 못했지만, 신고 문제 보다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케이시 부대변인은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앞서 북한이 핵 신고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北, 南에 10·4 선언 이행·경협 확대 주문

## 신년사, 한미동맹 강화는 경계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남측에 10.4선언의 “철저 이행”과 남북경협의 확대를 주문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체제고수와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남측의 대선 결과에 대해 2~3일 후면 논평까지 곁들여 보도했던 예년과 달리 새해를 넘겨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신년 공동사설은 남북관계에 대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언급에 그쳤던 과거 사설과 달리 10.4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주문과 기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새 이명박 정부의 출현에 대한 반응임을 짐작케 했다.

공동사설은 10.4선언과 관련, 특히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등으로 남북경협 확대를 기대했다. 사설은 또 이명박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발언을 의식한 듯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주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과 남의 정당·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락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남 비난의 단골용어였던 ‘반한나라당’, ‘반보수대연합 구축’ 주장도 사라졌다.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남한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듯한 이례적인 신년사”라며 “북한은 10.4선언을 남북관계의 주춧돌로 보고 이를 쌓아 올려야 한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가 지켜야 할 길은 이것(10.4선언)이라고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울 361-8111 / 678-8111  
 18회 공인중개사시험 성공을 위한 전국 수석 2명 특강! 1면대관! 100% 표정! 2011  
 개강 1월 2일 (수) / 2면시험 이후 3개월 특강 / "첫진도 시작반" / **국비무료** / 100% 합격률 보장  
 새 초 행정고시학원 / 3면시험 1월 2일 / 2면시험 1월 2일 / 1면시험 1월 2일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월 2일 / 주택관리사 / 100% 합격률 보장  
 새 초 행정고시학원 / 3면시험 1월 2일 / 2면시험 1월 2일 / 1면시험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 3면시험 1월 2일 / 2면시험 1월 2일 / 1면시험 1월 2일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시험학원 / 3면시험 1월 2일 / 2면시험 1월 2일 / 1면시험 1월 2일  
 010-9469-9373 / (062)673-4981